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
----------	------

발의연월일 : 2020. 7. 9.

발 의 자 : 서범수·박덕흠·태영호

김희곤·안병길·박수영

권명호·이영·신원식

강민국·박성민·정동만

백종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정활동비 등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①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이 조에서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구속 중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정활동비등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구속기간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이 조에서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②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u></p>